

카자흐스탄 키렙대학교 초청 강연  
(2015. 10. 29)

## 한반도 통일과 리더십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Its Leadership

손 학 규  
전 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방찬영 키렙대학교 총장님, 교수, 학생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리더십 포럼에서 강연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카자흐스탄과 명문 키렙대학교에 초청해주신 방찬영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특강을 마련해주신 데이비드 란디스 부총장님께도 감사합니다.

제 특강의 주제는 “한반도 통일과 정치 리더십”입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현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치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지구적 차원의 전환에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 경제의 축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이제 아시아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중화사상의 부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불안정성, 일본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과 체제 불안정은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에 핵심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배경으로 한반도는 지역 분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은 2015년 8월 DMZ 내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촉발된 포사격과 이에 따른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과정 중에 북한 김정은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 과정에서 전방 부대에 전투태세 완비를 명했습니다.

비록 이 분쟁은 8월 25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와 10월에 이뤄진 ‘이산가족상봉’ 후에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은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의 현장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정권 승계 초기 단계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굳히기 위해 DMZ에서 군사적 긴장을 도발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회의론은 그의 고모부 장성택의 총살 처형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의 숙청 및 처형 가능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통일 논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통일대박론’이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도 연중 주요 프로젝트로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통일’은 이로써 연초부터 한국 사회의 중심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통일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계 및 사회적 명망가로 광범위하게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통일 캠페인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조성되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장성택의 처형에서부터 감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보수진영 인사들 사이에서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 또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급작스런 붕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는 통일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상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로 흔히 알려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큰 기대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

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목표, 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일련의 최근 사태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나자, 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의 어느 누구도 ‘급작스런 붕괴 시나리오’를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가능한가?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UC San Diego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국내 우수 언론의 칼럼에서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것을 보고 북한의 노선에 명확한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거드 교수가 김정은의 노선 변화를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는 김정은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신 노선은 시장경제를 장려하여 경제적 엘리트층을 형성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기술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거드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투자 역량을 향상시키는 자본주의적 활동을 허용하며 이 개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북한체제의 종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그는 결론짓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북한의 붕괴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열병식에 중국이 공산당 서열 5위의 류원산 상무위원이 참석하도록 한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현실이 될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이에 대한 나의 답 역시 부정적입니다. 누구나 생각하고 있듯이 만약에 통일이 당장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지금 바로 통일되었을 경우, 남한의 현재 경제 능력으로는 북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38%였습니다. 서독이 튼튼한 경제를 가졌음에도 통일독일은 동독 주민들을 위한 높은 복지비로 인

해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3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5%에 불과합니다.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생활양식과 문화의 차이 또한 통일한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사회는 혼란과 혼돈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급변사태'는 이웃 초강대국들에게 평화유지 활동을 빌미로 북한에 진주할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지역을 4대강국이 분할 점령하는 비상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승인 없이 북한영토에 일본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적절한 통제 아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가 군사적 분쟁지역으로 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에 언급된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할 때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은 실현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행 가능하고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통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에 기초해야 합니다. 남한정부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공식적인 통일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노태우 정부의 이홍구 통일부 장관이 설계하였고, 3단계 통일 로드 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교류와 협력, 2단계는 국가연합, 3단계는 완전한 법적 통일입니다. 이 기본 정책 방안은 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역대 정부 통일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철학과 정책 기조는 평화 공존 및 북한 체제의 인정입니다. 이것은 첫째,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증진, 둘째, 평화체제의 정착, 셋째, 공동번영의 추구, 넷째,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 좁히기, 다섯째, 국가연합 또는 연방의 구축, 여섯째, 법적 통일의 가능성 열어두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통일의 기본원칙을 고려했을 때,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은 이런 원칙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교류 협력의 강화라는 첫째 원칙마저도 교착상태가 되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빈번하고 왕성한 교류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류와 협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었는데, 이는 만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을 취하면 북한에게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였고,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초기 때부터 악화되었습니다. 경제교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천안함 폭침의 보복 수단으로 취해진 5.24 조치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 초에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천명하였습니다. 실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전 지도자 김정일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스스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남북관계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앞서 말했듯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묵시적 전제로 한 ‘통일 대박론’을 말하면서 북한을 자극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에서 비핵화와 교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통해서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화와 교류의 대가로 물질적 보상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금년 8월 휴전선 목함지뢰 사태로 야기된 군사적 긴장상태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었고, 이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9월 28일 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도 강경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정책 방향은 그의 대 중국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것은 박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로서는 놀라운 행보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박 대통령을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옆자리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 다음 자리에 서게끔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열병식 참관 장면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다섯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비해 본인은 취임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고립정책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

고, 남한의 시각에서 볼 때도 최선의 정책일지는 깊이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것은, 첫째,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내고,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로운 지역 질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한의 이익을 기초로 했을 때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는: 첫째, 동북아지역의 안보긴장을 완화시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남북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고 이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아닌든 간에 북한체제의 인정과 보장이 따라야 합니다.

이 정책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당면과제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시행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24 제재의 폐기, 아니면 완화라도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휴전협정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 프로세스에는 북핵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에 대해 눈을 감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묵인해야 하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군비경쟁을 과열시킬 것입니다. 평화 프로세스에서 비핵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평화 프로세스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비핵화 요구는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태도에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는 그들의 안보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 뿐 만 아니라 중국 역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는 생존과 번영의 길은 오직 개혁과 개방이라

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장기적인 사회 안정과 이에 따른 체제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이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 없이도 시장경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그 모델을 보았습니다. 이곳 카자흐스탄만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괄목할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정치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특히 국유재산의 민영화를 포함한 낡은 사회주의경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이 나라의 개혁은 존경하는 방찬영 박사님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헌신적으로 보좌한 데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면서 한국통일문제와 특히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 강연하고자 한 것은 카자흐스탄이 정치적 불안정 없이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훌륭한 모범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만일 개혁이 제대로 실행되기만 한다면 시장경제 도입이 그들의 체제 안보에 별다른 위협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더십의 문제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세계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지도자는 새로운 세계의 도전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독일어로 'Zeitgeist'라고 하는 '시대정신' 또는 '역사의식'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지도자는 자신의 가문의 배경이나 정치적인 유산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만을 자신의 중심적 가치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머슴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특히 통일에 필요한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 공존과 포용의 리더십이고, 무엇보다도 '머슴정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인정하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사태' 시나리오에 기초한 압박전략이 아니라 북한과의 접촉을 늘려가는 포용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 포용과 협력 정책은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튼튼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남북농업협력정책'을 통해 북한에 대규모 벼농사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북한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르가 '접촉을 통한 변화'가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고 말한 대목을 상기해야 합니다.

북한체제의 보장이 한반도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의 행태나 특히 북한체제가 본질적으로 용인될 수 있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안보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국민들에게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새 지도자로서 김정은 제1비서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은 개혁 개방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는 시장 지향적 개혁을 통해 이를 경제적 번영으로 자신의 정치권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핵무기와 군사력보다도 더 효과적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장경제 도입으로 이루어질 복지증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북한국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주변국들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대화와 교류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능한 남한 지도자는 북한 지도자에게 개혁과 개방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북한의 국민과 지도자 자신에게 다 같이 이롭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한 지도자는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시장경제의 씨앗을 이미 물려받은 만큼, 개혁 개방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역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북한경제는 이미 상당 부분 장마당 경제에 의해 받쳐지고 있으며 북한은 꽤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과 정치체제 보장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이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통일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강연을 끝내고자 합니다. 언제 한국이 통일될 수 있을지 예측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통일은 통일을 말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